

Sujin Lee, *Wombs of Empire: Population Discourses and Biopolitics in Moder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3). 239 pp.*

조희수†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인구정치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이수진(Sujin Lee)의 『제국의 자궁: 근대 일본의 인구 담론과 생명정치(*Wombs of Empire: Population Discourses and Biopolitics in Modern Japan*)』는 전간기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지식인, 정부 관료, 사회운동가 등이 일본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 생산해 온 인구 담론과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출산 통제 운동, 우생학 운동과 공중 보건 정책, 인구과학(population science) 등의 분야에서 인구와 연관된 현상을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였고, 인구의 양을 조절하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재생산에 개입할 것이 요구되었다. 인구 담론의 이러한 변화는 인구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본토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농민을 집단 이주시킨 이민 정책, 그리고 전시기에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 가능한 자원으로서 관리하고 동원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제국의 자궁』이라는 책 제목이 시사하듯, 당시 일본의 인구 현상을 문제적이라고 본 신멜서스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의 인구 담론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정책에서 여성의 몸과 생식력은 늘 손쉬운 개입의 대상으로

* 원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예슬·이주영 선생님, 서평 작성을 제안해주신 이종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여성의학사연구소, heesoo0618@korea.ac.kr

여겨졌다. 저자는 당대 일본에서 여성의 신체가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상상되었고(4),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이 “분만 부대(子宝隊, *fertile womb battalion*)”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 정책에 동원되었음을 지적한다(2).

이 책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전간기 일본에서 형성된 인구 담론의 변화를 주로 다루는 전반부의 세 장과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의 전시기 인구 정책의 변화를 다루는 후반부의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에서는 신멜서스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1장), 페미니스트(2장) 등의 사회운동가와 인구과학의 형성에 관여한 과학자(3장)들이 어떠한 인구 담론을 형성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는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인구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국가 주도적인 인구 정책의 전개나 그를 뒷받침하는 인구과학의 형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온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저자는 일본 사회의 다양한 인구 담론에 먼저 주목하고 뒤이은 인구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의 담론과 정책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살펴본다.¹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담론에 주목하는 접근법이 인구가 단지 “정책(policies)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생물학적 재구조화를 통해 근대성을 다시 정의하고자 하는 정치(politics)의 현장”임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7). 독자는 이 책에서 소개되는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다양한 인구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을 인구로 바라보는 관점, 즉, 인간을 수량화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대의 담론 중 어떠한 것이 선택되고, 심지어는 변형 또는 왜곡하여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당시 일제의 인구 정치에서 어떠한 지점이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1장과 2장에서 다루는 사회운동가들은 당대에 일본 사회가 마주한 문

¹ 배은경과 조은주는 20세기 중후반 한국에서 시행된 인구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에서 인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폈다. 한편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일본에서 인구과학의 역사를 살펴본 아야 호메이(Aya Homei)는 인구과학의 형성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과학과 국가 주도적인 인구 관리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시간여행, 2012);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Aya Homei, *Science for Governing Japan's Popu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인구에 주목하면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신멜서스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산아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멜서스주의자들은 잉여 인구가 빈곤을 야기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나 피임 기구 활용 장려 등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령 일본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산아제한 단체인 조절회(調節會)는 공식적으로 신멜서스주의를 주창하고 우생학적인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산아제한을 통해 잉여 인구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산아제한연구회(産児制限研究会)나 무산자산아제한동맹(無産者産児制限同盟)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단체들은 빈곤의 원인은 잉여 인구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불평등한 생산과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면서도, 빈곤이나 질병과 같이 노동 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아제한을 통한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시기 일본의 인구 담론은 서구의 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점차 서구의 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저자는 2장에서 당대 일본인 페미니스트들의 인구 담론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초기에는 서구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산아제한 운동가인 마거릿 쐉어(Margaret Sanger, 1879-1966)의 1922년 일본 방문은 신멜서스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는 물론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² 쐉어는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종의 향상을 위해서 출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자발적 모성(voluntary motherhood)”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생산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함으로써 여성성과 모성을 분리하고 인간 종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자 했다.³ 즉, 그는 “모든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도전하고

² 마거릿 쐉어는 1922년 중국·일본·조선 등을 방문해 대중 강연과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산아제한의 필요성과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쐉어의 산아제한 담론은 중국과 일본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모성과 우생학 논의에만 한정됐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유연실, “근대 동아시아 마거릿 쐉어의 산아제한 담론 수용: 1922년 마거릿 쐉어의 중·일 방문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09 (2017), 111-166.

³ 쐉어의 산아제한론은 우생학적인 관점을 띠고 있다는 데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일각에서는 쐉어의 주장이 근본적으로는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이남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마거릿 쐉어와 통제의 개념”, 『여성과 역사』 30 (2019), 145-177.

자 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은 생어의 “자발적 모성”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생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은 모성을 여성의 내재적인 본성으로 이해하였고,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국가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는 사상이나 담론이 서구에서 비서구라는 한 방향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달리함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이었음을 보여준다.⁴

담론은 이렇게 그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 그를 발화하는 개별 화자의 특성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전간기 일본 사회운동가들의 주장은 유사한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는 일본 내 동료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 가령 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이시모토 시즈에(石本静枝, 1897-2001)와 야마카와 키쿠에(山川菊栄, 1890-1980)는 생어가 주장한 여성의 자발적 모성 개념을 받아들여 산아제한 논의를 펼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모성과 국가, 계급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을 취했다. 이시모토는 주로 중산층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산아제한론을 펼쳤던 인물로, 그는 여성의 권리를 향상하고 일본 민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산아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본 여성들이 너무 많은 아이를 낳은 결과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해 일본 민족의 질도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시모토가 주장하는 “비자발적인 재생산의 의무로부터의 여성 해방”이 결국 여성을 “건강한 어린이를 길러내는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이상향에 몰아맨다는 점에서 모순됨을 지적했다. 반면 야마카와는 노동 계급 여성들에 주목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 여성들에게 부여된 자녀 출산과 양육, 자녀 교육의 의무 등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노동자로서 쉼어진 재생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출산 파업(birth strike)”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역시 이시모토처럼 생어의 자발적 모성 개념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 그는 생어의 신멜서스주의적이고 우생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의 모성을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이렇게 담론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이 비선형적으로 번역된다는 저자의 주장은 20세기 동아시아의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 조선에도 서구나 일본의 우생학 논의가 활발하게 소개되었는데, 조선의 우생학은 당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맞게 서구는 물론 일본의 우생학과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 박지영, “민족성 향상을 위한 도구, 우생학”, 『우리 안의 우생학: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 (돌베개, 2024), 21-46.

전간기 인구 담론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 행위자에는 당대의 인구과학자들도 포함된다. 3장에서는 일본 인구의 과학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인구과학자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저자가 전간기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 인구과학자들의 논의를 배치한 것은 이들의 논의가 전간기, 더 나아가서는 전시기 일본 정부의 인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인구과학자들은 인구를 재배치하여 이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과학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인구 관리 체계의 중요성에 주목했는데, 그로 인해 인구과학자들의 논의에서는 우생학이나 산아제한보다는 이민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자는 3장에서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역사적으로 구체화하고, 일본의 인구 통치를 통한 권력의 작동 과정에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그동안 간과되었음을 지적한다. 푸코의 통치성은 단순한 법적 지배나 폭력적 억압이 아니라, 인구를 통계적·과학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관리 가능한 존재로 조직하는 일련의 합리적 기술과 실천을 의미한다.⁵ 3장에서 소개되는 1927년에 설립된 인구식량문제조사회(人口食糧問題調査會)와 1933년에 설립된 인구문제연구회(人口問題研究會) 간의 대비는 그러한 통치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조사회가 위생 인프라와 공공복지 서비스 발전 등을 제안함으로써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일제의 1932년 괴뢰국 만주국 설립 이후에 만들어진 연구회는 만주라는 텅 빈 지역에 일본 소작농들을 이주시켜 일본 본토의 인구 과밀과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상을 펼쳤다. 연구회의 제안은 실제 인구 정책으로 이어졌고, 일제는 일본인들을 제국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대에 국가가 인구를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상정하였고, 정책을 통해 그 자원을 실제로 이동시킴으로써 인구를 재조정하고 최적화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1930년대 초 일본에서의 통치성이 생명의 양과 질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공간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가졌음을 보였다.

이렇게 전간기 일본에서 인구과학의 발전이 단지 과학적 진보의 결과가 아니라 일제가 제국을 확장해 나가려는 전략적 실천이었다는 3장의 주장은 이 책보다 1년 앞서 출판된 아야 호메이(Aya Homei)의 『일본의 인구 통치를 위한 과

5 미셸 푸코 저, 최영찬 역, “통치성”,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2014), 133-156.

학(*Science for Governing Japan's Population*)』을 떠올리게 한다. 호메이 역시 푸코의 통치성 논의에 기반하여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일본의 인구과학의 형성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근대적인 국가와 제국으로서 일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었다.⁶ 다만 호메이가 인구과학의 형성에 집중함으로써 과학과 국가 주도적 인구 관리 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였다면, 이수진은 인구과학을 일본 사회의 다른 인구 담론과 함께 논의하면서 과학이 어떻게 당대의 젠더, 계급, 식민지 질서 속에서 구성되고 작동했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반부의 4장과 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시 일본에서 총력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건강한 인구의 양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보인다. 이 시기의 인구 정책은 일건 인구의 양을 줄이는 것에 주목하는 전간기의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후반부에서 전시 일본의 총력전 체제를 앞선 전간기 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서술함으로써 전간기와 전시기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에 도전한다. 전시기 일본에서 인구를 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인구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생명정치적 근대성에 관한 전간기의 관심과 맞닿아 있는 것이며, 전간기의 인구 담론들이 국가 체계와 실천으로 통합된 것이 전시기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다.

4장에서 저자는 전시 총력전 체제하에서 일본이 생명정치적 통치 기제를 어떻게 제도화해 갔는지 조명한다. 1938년의 후생성(厚生省) 창설과 1943년 건민국(健民局) 설치의 인구를 통계화하고 그들의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가 생명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중일전쟁 개전 직후 일제는 후생성을 설립하여 통합된 복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총력전에 대비하였다. 가령 이 시기에 시행된 대표적인 생활 개조 캠페인인 “건민운동(健民運動)”은 제국에 헌신하는 강건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황민화 이데올로기, 결혼과 출산 장려, 모자보건, 체력 증진, 일상생활의 합리화, 성병과 결핵의 예방 및 근절까지 두루 포괄했다. 이러한 캠페인의 목표가 결국에는 제국의 번영이었다는 것은 일제가 강조한 생명의 보호와 관리가 결국에는 개인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전시 체제에 복무하는 인적 자원의 조직을 의도하

⁶ Homei, op. cit.

였음을 보여준다.

5장에서 저자는 전시 일본의 총력전 체제에서 인구를 관리하고 동원하는 생명정치적 국가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일본 여성의 몸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보여준다. 전시기 일본 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 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여성들에게 건강한 어린이를 최대한 많이 출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자녀의 수가 많으며 모든 자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표창하고, 이들을 “본만 부대”로 명명하여 각종 여성지 등을 통해 이들의 소식을 널리 홍보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임산부 수첩(妊娠婦手帳)”에는 과거 출산 이력, 모친의 직업, 산전 진단 날짜와 세부사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의 가족과 여성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하고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규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저자가 이 장에서 일본 여성들이 이러한 인구 정책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였는지, 정책 시행 전후로 일본 인구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당대의 인구 정책이 가진 효과가 실제로 드러날 때, 당대 일본의 생명정치 체제가 갖는 규율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국 내의 모든 여성에게 이러한 요구와 보호(또는 보호를 가장한 규율)가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대부분의 일본인 여성들이 재생산을 위한 몸으로 정의되었던 반면, 전쟁에 동원되었던 성노예 여성(위안부)들은 그저 강간당하기 위한 몸으로 정의되었으며 전시기 일본 정부의 요구가 젠더·인종·계급에 따라 차등적이고 차별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인다. 일제는 조선이나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의 일본 점령지에서 미혼의 여성을 유괴하여 오거나 가난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에 종사하던 일본인 여성을 동원해 성노예제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일본인 여성들과는 달리 어머니가 될 수 없는, 단지 소모 가능한 성적 자원으로만 여겨졌다. 성노예 여성들은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통하여 임신 여부와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했고, 이러한 검진 역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본군의 성노예제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통제 도구에 불과했다. 저자는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이 젠더·인종·계급이 교차된 것이었음을 보임으로

써 당대 일제의 생명정치가 가진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0세기 전반 일본의 인구 정치를 분석한 이 책은 현재 일본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여 전후 일본의 인구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언급하는 짚막한 에필로그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개별 인간을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관리 가능한 존재로 조직하는 생명정치적 체제는 과연 제국의 종말과 함께 끝을 맺었는가? 저자는 “계속되는 ‘인구 문제’의 정치학(The Continued Politics of the ‘Population Problem’)”이라는 제목의 에필로그에서 과거 일본의 인구정치에서 발휘된 통치성은 오늘날까지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사라진 제국을 대신하여 제국주의적 인구 문제의 정치학을 지속적으로 떠받치는 기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자가 전간기와 전시기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세기 전반 일본의 인구정치를 분석하였듯, 일제의 패망 이전과 이후 무엇이 살아남았는지 분석한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구와 통치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